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0. 9. 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전시업계에 대해 금융·고용·세제·3차
추경 등 다각적으로 지원중 (news1 9.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전시회 취소·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업계를 대상으로 금융, 고용, 세정·세제, 3차 추경 등을 통한 단기 애로해소와 전시회 개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음
 - 긴급경영안정자금(중진공) 지원업종에 포함,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(고용부), 전시행사 방역관리지침 수립(중대본), 3차 추경(59.9억원) 등
- ◇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전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정부는 전시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
- ◇ 9.11일 news1 <전시·행사 업계 “코로나로 산업기반 붕괴 중... 각 부처는 책임전가”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한국전시·행사산업협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전시·행사 산업계가 코로나19로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
 -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무관심, 문체부는 모르쇠로 일관, 중기벤처부는 산업부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
 - 1, 2차 추경 배제, 3차 추경은 다른 사업에 비해 미약하게 예산 반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정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전시회 취소·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시업계를 대상으로 금융, 고용, 세정·세제, 3차 추경 등을 통한 단기 애로해소와 전시회 개최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왔음
 - (금융) 피해 전시사업자(시설, 주최, 디자인설치, 서비스 등) 대상, 긴급경영안정자금, 은행권 대출연장, 신·기보 보증 등 금융지원 실시
 - * 전시 주최사업자이외에 시설·디자인설치·서비스 사업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추가
 - (고용) 전시산업을 '특별고용지원업종'으로 지정('20.4.27)
 - * 고용유지지원금(휴업수당 90%, 6개월) 및 고용·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확대(6개월) 등 전시사업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
 - (세정·세제) 피해 전시사업자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유예, 전시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30% 한시 경감(국토부, '20.4월)
 - (방역관리) 전시회 방역관리지침 수립(중대본, '20.7월),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(2.3억 매칭지원) 등을 통한 안전한 전시회 개최 지원
 - (3차 추경)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기된 전시회*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 참가비의 일부(30%)를 지원 (추경 59.9억원)
- 금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전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정부는 전시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
 - * 다음 주 '코로나 장기화 대응 추가대책'(뿌리전시·섬유 등 위기업종 대책 등)발표 예정
 - '특별고용지원업종' 기간(4.27~9.15)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고, 기 확보된 3차 추경예산으로 금번 집합금지 조치로 연기된 전시회의 참가기업 유치를 지원할 예정
 -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, 전시지원 본예산 지원 범위 확대·조정을 통한 국내 개최비용 지원 허용,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무관객 전시회, 취소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회 대체 개최 등 지원 방안 검토중
 -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한 취소 전시회는 위약금, 매물 비용 등 전시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다양함에 따라, 지자체 및 민간(전시진흥회) 주도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

※ 문의 : 무역진흥과 김대일 과장(044-203-4030) / 윤한성 사무관(4034)